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 보고서

통상과

## 1. 총괄

1995년 한국은 미국 전체수출국 중에서 캐나다, 멕시코, 영국 다음으로 5번째 교역국이며, 농산물과 쇠고기 수출에 있어서는 각각 3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1994년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는 1993년 보다 15.6% 증가한 36억 달러였으며, 투자분야는 금융, 제조업, 유통업 등에 집중돼

있다.

## 2. 수입정책

### 가. 관세

한국은 기존에 개방되어 있지 않던 시장에 대해서는 관세율 쿼터를 실시하여 쿼터 내 수입일 경우 0세율을 받지만, 쿼터 이상의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농산물).

또한 관세인하 대신 내국세를 상승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ex. 내국세 - 소주 : 35%, 위스키, 브랜드 : 100%)하고 있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미국보다 3배가 많은 8%이며, 여기에 엔진크기에 따라 고율의 내국세를 더 부과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불리하게 하고 있다.

바테리(alkaline cell battery)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이 자국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92년 바테리의 관세를 11%에서 30%로 증가시켜 조종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20%로 낮추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관세를 낮추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나. 수량제한

한국은 수입추천제를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선 다변화 제도는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업체들에게 불리하

편집자 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매년 전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사례를 조사하여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이를 토대로 4월말에 있을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과 정부조달 불공정 관행국의 지정과 9월에 있을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등의 미국 대외통상정책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1994	1995
미국의 대한 수출	246억 달러	254억 달러
한국의 대미 수출	237억 달러	242억 달러

게 작용하고 있다. 1995년 12월에 레이저 프린터, 노트북 PC가 다변화 리스트에서 제외됐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품목중에는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것이 남아 있다. 한국이 1996년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통관

한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는 보통 2~4주 정도가 소요돼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통관지체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보사부와 농산부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3. 정부조달

한국은 WTO 정부조달 협정에 따라 1997. 1. 1이후 새로운 의무이행을 해야한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 조달시장 역시도 개방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Local Sources 충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불명확한 방법으로 미국업체들의 입찰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1992년 맺은 협정에 의하면, 미국 통신장비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988년 중합무역법 Section1377에 근거해 매년 이루어지는 재심에서 미국회사들은 한국이 광범위한 형식승인 조건, 영업비밀 보호 미흡, 국산화

정책 등을 통해 1992년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하에서는 셀룰러, 삐삐, 트렁크 서비스 등의 다양한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외국업체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 4. 수출 보조금

한국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수출정책을 통해 수출을 장려해 왔으나 GATT협정의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서 허용하지 않는 수출장려정책 및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WTO협정에 부합하는 세계·금융 혜택, 중소기업 지원 등 수용가능한 보조금 정책을 펴기로 합의하였다.

### 5.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한국은 1993년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법과 그 시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에 1995년에는 Special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소프트웨어 관세 평가가 매체물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가격에 부과되고 있어 방법적인 측면에서 투명하지 못하며, 차별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또한 산업디자인 보호측면에서의 효과적인 법률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국제품의 디자

인 및 기계의 설계도가 무단으로 복제되어도 미국 회사들은 호소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6. 서비스 장벽

한국은 우편배달업, 어학강습소, CATV, 보험중개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TV에서 외화의 방영시간을 1주일을 기준으로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분야와 관련, 지난해의 한국 시장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제한 등에 불공정한 장벽이 있으며, OECD 가입절차와 관련하여 양자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 7. 투자장벽

한국의 투자제도는 외국인 토지 취득과 개척 및 개발을 제한하는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규제가 많으며, OECD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8. 반경쟁적 관행

한국방송광고공사가 TV, 라디오 광고를 독점적으로 시간편성을 함으로써 미국회사들이 프라임타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편성 제도가 95년 폐지되기는 했지만, 방송공사의 규정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산업관련 단체들은 각종

권한의 위임을 받아 비회원사에 차별적인 관행을 취하고 있다. 1994년 한국의 조사에 의하면, 68개의 조사대상 단체중 48개가 반경쟁적 관행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험과 화장품 관련 단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반경쟁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합의하였으나, 그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률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단체들이 불공정 관행을 수행

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조사를 취하지 않고 있다.

## 9. 기타장벽

### 가. 시청각 제품

한국은 외국업체가 비디오 테이프 생산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디오 테이프 수입을 막고 있다.

### 나. 교역 및 투자장벽

미국업체들은 한국의 지나친 정

부규제와 광범위한 행정 재량권 등으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장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영기업이 미국의 한 업체와의 계약에서 미국정부에 불만을 호소하지 못하도록 미 행정기관들과의 접촉을 막는 규정을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으나 관련 기업은 향후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상호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 통상부, 전자·전기 기술개발자금 1,322억 지원

올해 정부가 주요 산업에 지원하는 출연금 및 융자금은 총 4,535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자·전기산업에 배정된 지원자금은 전체의 29%인 1,322수준인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되는 전자·전기분야 출연금은 △공통 애로기술개발 3백억원 △중기거점기술개발 2백70억원 △국제공동연구개발 30억원 △선도기술개발비(G7) 26억원 등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비 6백26억원, 산업기반기술 조성사업비중 기술인력 양성비 26억원 등 6백52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밖에 융자금은 6백70억원으로 나타났다.

출연금의 지원내용을 보면 중기거점기술개발비가 전체의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공통

애로기술개발비 42%, 기술인력양성비 6.95% 순이었다. 과제수는 공통 애로기술개발이 140개(추정)과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 31개, 중기거점기술개발 10개 등 총 1백96개였다.

또 융자금은 △시제품개발사업 4백억원 △첨단기술개발사업 2백70억원 등 6백70억원으로 나타났다. 과제는 시제품 개발사업중 일반품목 71개, 자본재산업전라품목 46개, 첨단기술개발사업중 일반품목 1백개, 소프트웨어 20개 등 2백37개 과제로 전체 과제수의 44%를 점유한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올 전자·전기분야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지원비중은 지난 87년~95년의 평균지원비중 39.

71%에 비해 8.06% 포인트나 줄어들었고 융자금도 12.77%포인트 감소한 27.07%에 불과해 전자·전기분야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지원이 크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정부의 각종 기업지원금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 전자·전기업종의 연구개발비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각종 출연금 및 융자금의 지원을 해당산업의 긴요성에 따른 지표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예산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